

[종합·해설]

김관재 광주고등법원장 신년 인터뷰

“국선변호·화해조정 확대 경제난 서민 고통 덜겠다”



▲강진 출신 ▲광주일고 ▲서울대 법대 ▲광주지법 판사(연수원 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순 천지원장 ▲전주지법원장 ▲광주지 법원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법률용어 쉽게 풀어쓰고
무고·위증 등 엄벌할 것”

“법률을 쓰는 게 어렵다. 고등법원에서는 올해부터 국선변호인제를 확대하고 소송 구조제를 가급적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판결보다는 조정과 화해를 통한 당사자들간 감정의 물꼬를 터주는데 노력하겠다.”

—취임 후 1년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은.

▲사법 기능을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사법권도 국가 권력의 일부로써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항상 국민의 편의와 인권을 생각하고 법관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취임 이후 성과를 꼽는다면.

▲여러운 판결문 풀어쓰기나 ‘원스톱 민원실’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판결문은 아직까지 어색한 표현도 있지만 상당한 진전은 이

“적극적인 사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민들의 고충을 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관재(55) 광주고등법원장은 5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어려울 수록 민원인들의 고통과 불편은 커진다”며 “고등법원이 지역 기업이나 지역민들의 고충을 더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기 위해선 우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보다 재판을 잘하는 법원을 만들어서 민원인들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법원장 취임 이후 1년간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도 고법재판이 최후 사설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고법원장은 “모든 재판업무에 철저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관철돼야 한다”며 “또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심리방식과 증인심문방식, 판결문 작성 등을 광범위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고법원장은 또 “법원의 판결문이 길다고 설득력이 놓아지는 것이 아니다”며 “취임 이후 강조한 ‘법률용어 풀어쓰기 운동’ 등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고법원장과의 일문일답.

—경제가 어렵다. 올해 서민을 위한 법원 행정은 어떤 것인가.

▲지역 경제가 특히 어렵다. 고등법원에서는 올해부터 국선변호인제를 확대하고 소송 구조제를 가급적 많은 소송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판결보다는 조정과 화해를 통한 당사자들간 감정의 물꼬를 터주는데 노력하겠다.

—취임 후 1년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은.

▲사법 기능을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사법권도 국가 권력의 일부로써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항상 국민의 편의와 인권을 생각하고 법관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취임 이후 성과를 꼽는다면.

▲여러운 판결문 풀어쓰기나 ‘원스톱 민원실’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판결문은 아직까지만 어색한 표현도 있지만 상당한 진전은 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목표는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확보에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광점별 심리 및 증인신문, 판결문 작성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데 상당수 법관들이 입장은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적잖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내 사법제도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형사사건 중 자백사건과 부인(否認)사건을 구별해서 심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인사건의 경우 양형의 입증 정도가 90%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집중 심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향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절실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법원이 사후 심적 기능보단 속속적 운영에 그치는 바람에 원외재판부 증설 요구가 봉гу를 이루고 있다. 또 1심을 강화하기 위해 1심 변론판사의 경력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

—무고나 허위소송 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안은.

▲법원이 엄정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위증이나 무고, 사기 등 거짓말에 바탕을 둔 범죄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이웃나라인 일본과의 비교조사 어려울 만큼 민주주의과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 당사자나 증인의 거짓 말이 개입되면 법관이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다. 거짓말로 인해 잘못된 재판이 이뤄진다면 환자에게 되레 그릇된 처방을 내린 것과 같다.

—국내법은 물론 외국법에도 조례가 깊다고 들었는데 외국법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20여년 전부터 10년간 독일법 스터디 모임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또 지난 2000년부터는 매일 근무 세 시간 전에 미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노동법 등 6개 그룹의 영미법 스터디 모임을 이끌었다. 이는 선진 사법제도 습득을 통한 자기계발과 함께 소속 법관들의 법률지식 고양에도 한 끝을 했다고 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현우 국회의장 주최로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색한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맞잡은 與野…대치정국 풀리나

교섭 3단체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협상 돌입

끝없는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5일부터 대화를 갖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등 3교섭 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을 갖고 광점법안 처리 방안에 대한 협상을 들어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대화를 재개한 것은 구립 31일 협상 결렬 이후 5일 만이다.

교섭 단체는 지난 2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이 선진 창조 모임의 신임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협상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해 회담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협상에서 원내대표들은 지난해 말 마련했던 최대 광점인 FTA 비준안은 2

월 중 합의처리, 언론 관련법은 2월 중 상정 및 합의처리 노력이란 내용의 가합의 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협상 재개 수순에 들어갔지만 변수는 당내 강경파다. 김 의장이 전날(4일) 직권상장 자체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협상대표들에 전권을 부여해 협상이 책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강경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진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내 강경과 의원들은 가합의안 중 미디어 관련법 2월 합의처리 노력 등의 구문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홍 원내대표가 협상 중단을 신언하기 전 의원총회에서 기협상 안에 대한 집중 성토의 장의 됐다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본회의장 농성 해제도 검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의 농성 해제에 이어 본회의장 농성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5일 “여제 의총에서

분회의장 점거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다만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일이나 그 직전에 점거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임위에

대기 중인 법률 중 합의 가능한 경제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도 본회의장 농성 해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자 하는 반민주악법 날치기 시도를 즉각 종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성장 강제 해산에 대한 국회의장 사과와 MB악법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뜻대로 뒀다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민노 광주시당 'MB악법 저지' 성명

민주당 광주시당은 5일 ‘MB악법 저지 투쟁본부’ 결단식을 갖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자 하는 반민주악법 날치기 시도를 즉각 종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성장 강제 해산에 대한 국회의장 사과와 MB악법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변함없는 공동 투쟁을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